



흑한 속 큰고니 망중환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진 지난 20일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월동 중인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무리가 만조로 먹이활동이 어려워지자 한가로운 모습으로 쉴 틈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무등산 정상 내년 9월부터 상시개방

광주시·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무등산 정상이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된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강기정 시장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발표에 이어 내년 9월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세부절차 이행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1966년 공군 주둔으로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이 2023년 9월부터 시민의 품으로 되 돌아온다.

협약서는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역할 분담 ▲세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상시 개방 탐방로 설치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상호협력 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은 내년 2월 상시 개방 탐방로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부대 철책 시설, 탐방로 설치 등을 마친다.

앞서 광주시는 군 당국과 협의, 2011년 무등산 정상을 처음으로 일시 개방했다.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5차례 정상을 일시 개방했다. 이 기간 무등산 정상을 찾은 등산객은 47만5000명이 넘는다.

강기정 시장은 "1966년 12월 20일 무등산 정상에서 군사업무를 개시한지 56년이 되는 오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협약을 맺게 돼 무척 뜻 깊다"며 "기술과 안보 체계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이 되면 온전히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 중단 '불편 없어야'

“대법서 패소하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

“시간·비용 투자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을 중단하고 바우처택시를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전용차량(116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택시(임차택시·89대), 바우처택시(100대)가 그것이다.

광주시는 이중 전용택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로, 일반 승객은 태우지 않는다. 현재 89대가 운행 중이

다. 광주시는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1년 단위 인차계약을 체결, 월 28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해당 택시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이용 요금도 받는다. ▶관련기사 9면

문제는 전용택시를 운영했던 A씨가 2019년 말 광주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발생했다.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3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시는 근로계약이 아닌 인차계약임을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운영을 근로로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결국 전용택시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전용택시

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이 돼 온 바우처택시를 250대까지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달 초 대법에서 패소하자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부랴부랴 바우처택시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광주시가 새해 시작 한 달을 남겨 놓고 별다른 공지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용택시 기사의 경우 장애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장애인에 발생했다.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3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시는 근로계약이 아닌 인차계약임을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운영을 근로로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결국 전용택시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전용택시

가 크다. 바우처택시 확대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정 부분 광주시의 지원을 받는 바우처택시는 전용택시와 달리 일반 영업에도 나서는 택시다.

이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택시를 이용 중인 B씨는 “전용택시 운영을 중단하면서 장애인들의 의견과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최소 몇달 만이라도 전용택시 운영을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로 인해 전용택시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청소년 73% “5·18 왜곡·편향자 처벌 필요”

5·18기념재단, 청소년 대상 5·18 인식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7~8명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또는 편향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학술연구·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만 19세 이하 청소년 1012명을 대상으로 5·18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과, 응답자의 72.8%가 ‘5·18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청소년은 4.1%에 불과했다.

‘5·18과 관련한 국민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75.1%에 달했고, ‘개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앞서 지난 12월 취임한 김광동 진실화해추진위원회가 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발표한 논문을 통해

5·18 관련 사실 일부를 왜곡했다. 당시 전씨는 회고록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편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소년들은 김 위원장이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가짜 뉴스들을 꾸준히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청소년들은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 할 5·18 과제 1순위로 ‘피해자 보상 및 치유’(33.4%)를 꼽았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5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2면

생활고에 부업되는 가장들 4면

목포에 김 산업 전무기관 8면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